

한반도 통일과 군사통합 (군사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관수*

요 약

이 논문은 한반도 통일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한 군사통합을 추진하게 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가를 군사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현 상황에서 남북한 통일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제한되나 군사적 폭력을 관리하는 군사통합은 평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군사통합이 실패하면 통일 자체도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실천적 측면에서 정교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적합한 군사통합의 유형과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남북한 군사통합 추진 시 군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이 중 핵심과제와 중요과제는 무엇이고 실천적 측면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Military Integration Focusing on the Military Tasks

Han Kwan Soo*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at to be prepared and implemented for the military integration when South and North Korea are making progress toward unification. Although we can not exactly predict when the unification will be completed at this time, preparations for the military integration should be ready ahead of time. Since the failure of the military integration can threaten the unification, elaborated and practical solutions are required. Therefore, the study trie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 1) What types of the military integration are desirable and what are the prerequisites for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 2) What potential military tasks could be caused by military integration? ; 3) What are the core and major tasks among them and how could they be solved in practical aspects?

Key Words :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military integration, military tasks, core tasks, major tasks

접수일(2015년11월30일), 수정일(1차:2015년12월25일),
게재확정일(2015년 12월 31일)

★ 이 논문은 2015년 교육사 연구용역인 『통일한국의
지상군 군사력 통합에 대한 고찰』의 일부를 발췌
하여 수정·보완한 내용임.

*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1. 서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 ‘드레스덴 통일구상’,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으로 통일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시 한중정상회담에서 박대통령은 ‘조속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장하여 ‘한민족에 의한 평화적 통일 지지’라는 중국 측의 화답을 받았다[23]. 이에 대해 북한은 ‘극히 무엄하다, 동족대결만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비난하여[12] 남북한 통일이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통일에 대비한 준비는 분야별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군사통합에 관한 연구 실적도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과 군사통합 문제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 등이 작용하고 있고, 만일 군사통합이 실패한다면 정치통합뿐만 아니라 통일 자체도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군사통합 방안의 강구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이제 군사통합은 통일이 가시화되어 여건이 조성되면 군사통합추진단이 북한 지역에 전개하여 군사통합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군사통합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핵심과제와 중요과제로 구분하여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군사통합의 개념

통합의 개념은 ‘서로 다른 양 체제가 정치와 제도적으로 결합하고, 결합 후에도 양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18,19,20,21,22]. 따라서 남·북한 군사통합은 “독자적으로 운용되는 한국과 북한의 군대를 단일군대로 결합하여 통일한국군이라는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고, 양

국이 보유하고 있던 군정권과 군령권을 단일 국가 소관으로 하는 양국 간의 군사통합 행위”라고 할 수 있다[17].

2.2 한반도군사통합의 유형과 전제조건

군사통합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크게 합병국과 피합병국의 합의 여부에 따라 ‘합의통합’과 ‘강제통합’으로, 통합 형태에 따라 ‘대등통합’과 ‘흡수통합’으로 분류된다. 이 양자를 조합하여 ‘강제적 흡수통합’, ‘합의적 흡수통합’, ‘합의적 대등통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4, 11, 14].

남북한의 현실적인 통일 환경을 고려할 때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적 흡수통합과 동일한 체제 간에 이루어지는 합의적 대등통합의 가능성은 낮다[7, p.50].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통일 방안은 합의에 의한 흡수통일이며, 두 가지의 통일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서독이 동독을 통합한 형태와 유사하게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여 통일을 원하는 경우와 북한이 급변사태로 붕괴되는 경우이다. 어떤 형태의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군사통합은 한국군 주도의 합의적 흡수통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군사통합 단계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군사적 폭력을 보유한 북한이 한국에 대한 각종 저항을 포기하고 하나의 국가로 통합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13]. 통일이 가시화되고 남북군사통합에 대한 합의가 결정되면 북한군의 일반적인 인식은 부정적 사고를 넘어 적대적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통일한국군에 편입되는 북한군을 10만 명으로 가정할 때 119만여 명의 북한군[6] 중 약 100만여 명 이상이 전역을 하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의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상황의 전개가 다양하여 독일사례와는 달리 폭력적 과도기를 거쳐야 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군사통합간 안정 확보는 실질적 군사통합의 전 단계에 적용되는 핵심적인 전제 조건으로 작용될 것이고, 실패 시 내란 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군사통합으로의 전환이 강요될 것이다.

2.3 상황 및 가정에 따른 군사과제 도출

본 연구의 실천적 측면에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남북한 군사통합의 전제 및 가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 군사통합은 한국의 주도하에 평화적 군사통합이 될 것이며, 만일 통일 형태가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이라 할지라도 북한의 집권층은 평화적인 군사통합을 지향할 것이다. 둘째, 주변 4강은 한반도의 통일 및 군사통합을 인정하거나 암묵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만일 주변국의 인정이 없다면 통일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셋째, 남북한 군사통합에 관한 협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으나 최종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 한반도 군비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만일 군비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본 연구의 절차에 준해서 군사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섯째, 북한군 장비의 대규모 전역은 한국의 경제적 능력으로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한 군사통합 시 북한군의 유일사상과 한국군에 대한 적대감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남북한 군사통합의 상황은 남북한 간에 통일에 대한 여건이 형성되고 논의가 활발해지면 한국군은 군사통합을 준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군사적 과제는 크게 핵심과제와 중요과제의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핵심과제는 남북한의 두 개의 군대를 한 개의 군대로 통합하는데 실질적으로 핵심적 업무이면서 주로 군에서 담당해야 하는 과제이고, 중요과제는 군사통합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나 군사통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고, 군이 주도적으로 정부의 타 부처와 협조하여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핵심과제는 인적통합, 물적통합, 이념통합으로[18], 중요과제는 남북문제와 주변국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과제들은 어떤 형태의 군사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공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표>에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남북한 군사통합시 군사 과제

구분		군사과제
핵심 과 제	인적통합	1.비이성적인 북한군의 정상화 2.부대인수 및 병력통합
	물적통합	3. 무기 및 장비 통합 4. 시설통합
	이념통합	5. 동질성회복을 위한 교육
중 요 과 제	남북문제	1. 군사통합추진단 북한전개 2. 계엄 선포 여부 검토 3. 개성공단 안전 확보 4. 북한 난민 통제
	주변국문제	5. 주변국 위협에 대한 군사대응

3. 군사통합의 핵심과제

3.1 인적통합

3.1.1. 비이성적인 북한군의 정상화 노력[18]

남북한의 안정적인 군사통합을 위해서는 비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북한군을 정상화 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북한군은 창군 이래 당과 혁명을, 최근에는 김씨 일가를 보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북한의 최종 목표인 전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는 무력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11, pp.61-63]. 따라서 북한군의 특성은 엄격한 명령과 통치체제 속에서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받고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세뇌 교육이 되어 있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매우 호전적이고 비인간적인 잔혹성을 나타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기준에서 보면 매우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행태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북한군을 어떻게 정상화시켜서 평화적 협상과 협의의 상대로 끌어내어, 평화적인 절차로 흡수 통합할 것인가는 군사통합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비이성적인 북한군의 정상화는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장단기로 구분하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최소한 군사통합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단기적 방법을 강구하여 군사통합을 진행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북한군의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단기적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우호세력과 군사통합 협의 후 작성하는 합의문에 북한군의 지휘권 접수, 병력, 무기 및 장비, 시설통합의 세부적인 규정, 즉 시기, 절차, 방법 등을 분명히 기술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군사통합의 가장 큰 위해요소가 되는 무기와 탄약의 현황제출, 지역별 집결장소, 확인절차 등을 명시하여 비이성적인 북한군이 무력저항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다음은 군사통합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조치로써 북한군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는 전량 회수해야 한다. 특히 비우호적인 세력이 무장을 통해 집단적 저항을 하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군 수뇌부의 변화를 유도하여 군사통합 이전에 무장해제 지시가 예하 부대에 하달되어야 한다. 북한군은 엄격한 명령체제 속에서 움직이므로 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대로 따르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한군 수뇌부에게 현 체제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득하고, 통일의 당위성과 현실적인 생존 방안을 제시하여 그들의 생각을 전환시켜 통일과 군사통합에 동의하고 예하 부대들에게 무기를 자진 반납하도록 명확히 지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무기의 자진 반납은 북한군의 특성으로 보아 최고사령관이나 총정치국장 명의로 하달되어야 효과가 높을 것이다. 무장해제만 완벽하게 시행된다면 최소한 군사통합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 방안은 수뇌부의 변화에 실패할 때 시행되어야 한다. 해당 부대 지휘관을 설득하고, 지휘체계가 와해되어 게릴라 형태로 활동할 경우에는 소규모 부대별로 설득과 변화유도 노력을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의 붕괴 실패와 체제 유지 불가능한 상황을 설명하고, 수령 중심의 유일 독재체제의 만행, 실패한 공산주의 체제의 실상,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등을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 설명과 설득의 방법은 직접 접촉 시는 대면 설명으로, 직접 접촉이 어

려울 때는 전단지과 방송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1.2 부대인수 및 병력통합

북한군 부대인수 및 병력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지휘권 인수 및 무장해제를 해야 안정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다. 먼저 지휘권 인수의 원칙은 북한군 전체대의 지휘 체계를 동시에 장악한 후 단계별로 통일한국군 지휘체계로 전환하고, 지·해·공군 별로 인수로원을 북한군 대대급까지 과건하여 무장해제 및 부대해체, 병력 통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 원칙에 기초하여 북한군 부대 인수는 해체부대, 계속 존속부대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지휘통제 체제를 와해하기 위해 인민무력부 등 고급사령부를 해체하고, 특히 총정치국으로부터 말단 중대까지 편성된 노동당의 조직을 우선적으로 해체해야 조직적인 무력저항이 차단될 것이다. 한국군의 인수단은 인수대상인 북한군 부대와 유사 기능에서 근무하여 경험이 풍부한 요원으로 편성해야 효율성이 높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합참근무요원이 북한군 총참모부를, 특전사 요원이 경보교도지도국(11군단)을 인수하여 해체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가 집중된 북한군 고위 장성이나 지휘관, 가능한 많은 통일한국군 편입 지원자를 친화화하여 활용한다면 부대 인수가 원활히 진행되어 신속성이 보장될 것이다.

북한군의 무장해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우선 무기와 탄약을 부대해체 전에 전량 회수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미군은 이라크 전쟁에서 군사작전은 46일 만에 성공했으나 바그다드 점령과 동시에 무기회수 없이 이라크 군 대를 해산함으로써 무기를 소유한 전역군인이 저항세력으로 등장하여 7년 5개월 동안 안정화작전 실시해야만 되어 군사작전 성공을 전쟁승리로 연결하지 못한 사례를 남겼다[9]. 군사통합추진단은 먼저 무기 생산단계에서부터 개인 불출시 작성하는 '무기 및 전투기술기재 개인발급대장'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추적하여 군사통합 이전까지 생산된 북한군의 무기 및 탄약의 전량을 회수해야 한다.

다음은 무기 및 탄약을 불능화 처리해야 된다.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고, 무기는 뇌관을, 탄약은 신관을, 화포는 발사통제기와 폐쇄기를, 전

차는 조준경을, 해상장비는 엔진과 통신 장비를, 항공기는 엔진과 로터 등 핵심 부품을 제거해야 한다[11,p.134]. 이와 같이 무기와 탄약을 분리시 북한군의 무기의 효용성은 대폭 저하될 것이다. 아울러 무기고 및 탄약고의 경계 대책도 강구하여 불순세력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군사통합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북한군 병력통합의 전체적인 개념은 먼저 통일한국군에 편입될 병력 규모를 먼저 판단한 후 북한군 총병력을 통일한국군 활용 인원과 전역 인원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정립할 수 있다. 이 개념에 의한 심사·분류기준은 첫째, 북한군 체제 지탱의 핵심인 대령급 이상의 장교와 정치장교, 그리고 노령인 50세 이상의 장교들은 즉각 강제 전역시킴으로써 이들의 저항 세력화를 차단하고, 둘째, 전역 희망자는 정신 교육, 직업보도 및 보조급 지급 후 복무해제 조치하며, 셋째, 편입 희망자는 부대 건제가 아닌 개별 편입을 원칙으로 하여 군내 무장 세력화를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다[17,pp.106-107]. 통일한국군에 편입될 병력 규모는 통일한국군의 구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북한군 부대 인수 및 통합과정에서 무기와 장비를 운용하거나 관리하는 요원, 탄약과 시설의 경계 및 관리요원 등을 위주로 약 10만 명 정도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17,p.104].

3.2 물적통합

3.2.1 무기 및 장비통합

북한군의 무기 및 장비 통합의 원칙은 먼저 통일한국군의 전략과 배비에 기초하여 활용될 무기와 장비를 판단한 후 활용무기는 통일한국군에 편입하고 불용장비는 폐기하거나 해외 판매를 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성공적인 남북한 무기 및 장비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독 연방군이 정확한 현황 파악에 약 1년이, 분류에 약 3개월이 소요된 사례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무기 및 장비 통합의 절차는 먼저 북한 지역에 파견된 북부사령부의 현장확인팀이 현황을 파악하여 실용장비(활용장비), 치장장비(한시적 활용 및 활용 보류장비), 불용장비(폐기장비)로 구분한

후 집결시켜야 된다. 집결은 이동의 용이성과 공간을 고려할 때 지상군이 사용하는 소화기와 공용화기는 여단 및 연대 단위, 중화기와 중장비는 사단 단위로 집결하고, 해군은 전대와 기지단위, 공군은 비행단 단위로 집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북한군의 무기 및 장비는 노후 되어 있어 통일한국군에서 사용 가능한 무기와 장비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11,p.135]. 지상군은 비교적 신형 장비인 천마호 전차, 240밀리 신형 방사포, 170밀리 자주포 등 장사정 포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량 폐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17,p.111]. 해군함정은 비대칭 전력인 일부 잠수함(정), 초계함 일부, 공기부양정, 공군은 MIG-23 및 SU-25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17,p.116-120]. 무기 및 장비 처리방안은 일괄폐기, 원자재 재활용, 민수용 전환, 해외 판매·지원, 정부 이관 등이 있으나 해외 판매 시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17,p.109].

탄약은 통일한국군에서 운용하기로 결정된 무기체계에 종속되는 일부 탄약 외에는 모두 불용탄약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정확한 탄약 보유량은 파악이 제한되나 약 110만 톤 내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량 재래식방법에 의해서는 폐기가 제한되므로 새로운 산업폐기 기술의 운용이 요구된다.[7,p.66-68].

대량살상무기(WMD), 특히 핵문제 해결은 남북한 군사통합에 가장 민감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북한은 군수공업부 통제하에 핵 관련 약 30여 개의 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 2094호를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마저도 1,2차 핵실험과 달리 이 제재에 찬성하고 북중관계가 소원해지는 계기가 되었음이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이 가시화되면 주변 강대국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처리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만일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자체도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한 군사통합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 폐기는 가능한 군

사통합 협의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핵 폐기시에는 국제적 전문가를 초청하여 북한의 핵무기 처리 작업을 진행시켜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만일 군사통합 협의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 공조체제를 통해 특수임무부대를 투입하여 무력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특수임무부대는 외곽방어, 내곽방어, 핵심시설의 3지대 개념에 의해 다중통제를 하고, 외곽방어는 보병이, 내곽방어는 특수전 부대가 장악한 상태에서 특수전부대와 전문요원이 핵심시설에 진입하여 대량살상무기를 해체해야 될 것이다[16,pp.85-88]. 아울러 화학무기, 생물무기는 북한이 국제협약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만일 실패시는 핵시설과 유사한 특수임무부대에 의한 무력화 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3.3 시설통합

북한은 전 국토의 국유화와 요새화의 정책 추진으로 대규모의 군 소유지와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도시화에 따른 군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통합은 훈련장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군 시설통합의 전체적인 개념은 먼저 통일한국군 전개규모와 지역을 판단한 후 사용성을 검토하여 활용시설은 통일한국군에 편입하고 불용시설은 매각, 이전한다.

이와 같은 개념에 기초한 시설통합의 원칙은 첫째, 통합 초기에는 북한군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은 군용시설로 전환하여 통일한국군 부대 전개 소요를 충족하고[5,p.278], 필요시에는 징발조치를 하며, 둘째, 인수 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하거나 정비해야 될 시설, 지하시설, 환경오염이 심하거나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시설 등은 가급적 불용 처리한다[5,p.279]. 이를 위해서는 독일 군사통합 시 구동독군과 소련군이 사용했던 시설이 환경오염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 구한국군의 다수의 부대가 재배치 될 것이므로 북한군의 활용시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한국군이 전개할 각종 작전과 군수 및 행정지원

시설, 예를 들면 부대 주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인입도로, 해군의 항만이나 공군의 활주로 및 격납고 등은 북한군이 사용하던 시설을 활용하면 될 것이나 [5,p.280], 경제난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기와 복지후생 관련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량의 시설매각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서독연방군이 동독군을 통합할 때 운용했던 부동산 신탁 및 매각 회사 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책 및 방벽과 지뢰와 같은 장애물은 우선 통로를 개설하고 나머지는 필요시마다 제거해야 될 것이며[17,p.129-130], 특히 약 25만 발로 추정되는 DMZ 지뢰는 수작업에 의한 제거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방사단의 민경부대 전역군인으로 구성된 지뢰제거 회사를 운용한다면 지뢰 제거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북한군의 대량 전역으로 인한 사회불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3 이념통합: 재사회화 교육

남북한 군사통합 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적대적이었던 양국의 장병들을 어떻게 하나로 융화시키느냐, 즉 어떤 교육을 시켜 이념을 통합하여 동질성을 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북한군 재사회화 교육이 될 것이다. 이념통합의 원칙은 전 북한군에게 실시하는 임시교육과 통일한국군 편입자에게만 실시하는 정규교육의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임시교육은 심리적 안정유지와 개인진로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한국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존 북한군의 지휘조직을 존중한다는 내용과 남북한 군사통합의 합의사항을 포함한 각종정보 제공, 그리고 전역 시 보상책과 진로상담 등을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5,p.289-290].

정규교육은 북한군 장병이 과거 통일 이전까지의 부담을 일소하고 통일 이후의 사회 환경을 수용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17,p.132]. 특히 유의할 점은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생활해온 공산주의에 대한 과도한 비판, 이상화의 대상이었던 김정은 일가에 대한 직접적 공격 등은 동질성 회복보다는 오히려 반감을 가질 소지가 있으므로 일방적인 강조보다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5].

교육 방법도 초기단계에서는 한국군에 의한 교육보다는 북한군내 친한세력을 교관으로 활용한다면 신뢰성이 높고 적대감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원성분, 가용시간, 교육목표, 기대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육하되 프로그램, 예산, 군수지원 등 사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동화교육 기간 동안 그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동질성 회복을 교육하는 교관단은 서독의 재교육을 담당했던 교수들이 동독군에게 낮은 자세로 인간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 통합을 이루었던 교훈을 기억하고, 북한군에게 승리자 또는 점령군으로서의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2].

4. 군사통합의 중요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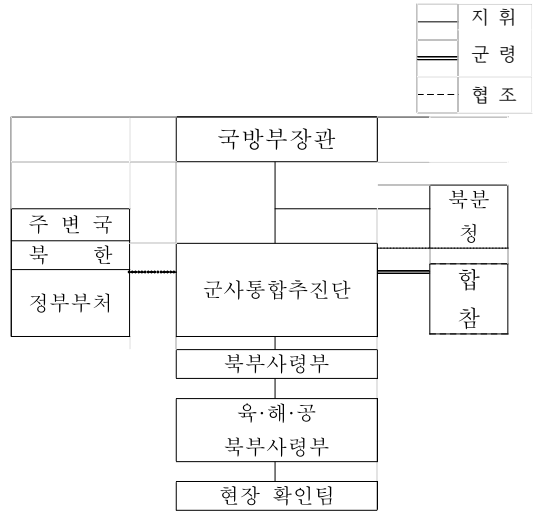
4.1 남북문제

4.1.1 군사통합추진단 편성 및 북한지역 전개

남북한 군사통합의 효율성, 안정성, 복잡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한국군 군사조직과는 별도로 군사통합추진을 위한 한시적이고 전문화된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군사통합에 관한 기획과 계획, 의사결정, 조정 통제 및 감독 등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고, 합참의장으로부터 군령분야에 대한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평시 국방부의 정책실장이 겸무하다가 군사통합이 가시화되면 증편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5,pp.185- 188]. 군사통합추진단은 국방부 내에 주변국과, 북한과, 대외협력과, 군사통합추진과로 편성하여, 주변국과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파견된 무관을 중심으로 군사외교를 담당하며, 북한과는 군사통합을 위한 북한과의 군사 협상을, 대외협력과는 통일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군사통합추진과는 북한지역에 전개되는 북부사령부를 통해 실질적인 군사통합을 추진한다.

북한지역에는 국방부의 업무를 분장하는 국방부북분청과 실질적으로 군사통합을 추진하는 북부사령부를 편성하여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북부사

령부는 북한지역에 전개하여 북한군을 인수하여 인적, 물적, 이념적 통합을 실시하는 임무를 가지며, 그 편성은 군별로 군사통합을 추진하는 육·해·공군북부사령부와 현장에서 군사통합을 위한 병력, 무기 및 장비, 시설 등을 파악하는 현장확인팀과 군사통합추진팀을 편성하며 <그림>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그림> 군사통합추진기구 편성

군사통합추진기구가 북한으로 전개시 북한군의 무력충돌과 저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 DMZ 통과를 위한 통로개설이 요구되는데 군단별로 2.3개의 통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8]. 만일 개설이 불가능할 때는 해상통로로 남포, 원산, 청진에 전개하는 계획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합추진단이 전개하는 통로상의 위협이 되는 애로와목 지점은 사전에 파악되어 경계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1.2 계엄 선포 여부 검토

군사통합 간 북한사회는 매우 혼란할 것이다. 각종 유언비어가 유포되면서 한국군이 부대인수를 위해 북한지역에 전개하면 혼란과 혼동은 더욱 증폭될 것이므로 계엄을 선포할 것인가를 타 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나 통합방위작전 체계만으로 치안 유지가 어려우며, 계엄이 선포되지 않고는 질서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는 계엄을 선포해

야 될 것이나, 반대의 경우는 오히려 북한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유발하고 주변의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11,p.111].

4.1.3 개성공단 안전 확보

개성공단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군은 한국 노동자 억류 또는 인질로 군사통합을 방해하는 협상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위협을 가하여 국제적 여론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성공단 안전을 위한 특수임무부대(task force)를 구성하여 개성공단 축선에 배치된 군단에 배치하여 상황 악화 시 개성공단과 주위의 중요지형을 장악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으로부터 휴전선에 이르는 철수 통로가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DMZ로부터 개성공단까지의 도로는 협소하므로 북한군의 특수부대에 의한 사전 점령에 대비하여 중요 애로지역을 우선적으로 장악하고, 주변에 배치된 북한군 포병을 우선적으로 해체하는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8,p.75].

4.1.4 DMZ 월경난민 통제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대규모 난민이 지상 또는 해상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 물론 초기에는 중국으로의 난민이 주류를 이루겠지만 북한정권의 통제가 이완되거나 통제 불능 사태가 되면 대규모 난민의 한국 유입은 북한지역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극심한 사회혼란을 유발하며, 한국군이 난민처리에 투입되어야 하므로 군사통합에 집중을 방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16,pp.80-82].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으로 탈출하는 난민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한국의 DMZ 또는 동서해의 해상으로 유입되는 난민은 군사통합의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대비책의 강구가 요구된다.

DMZ 또는 해상으로 유입되는 난민의 처리 절차는 공통적으로 정보수집 → 탈북허용범위 결정→ 국내 수용→ 북한 송환의 4단계를 적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16,p.84].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각종 정보 자산을 이용하여 지상 축선별, 해역별 이동징후를 수집하고, 탈북허용범위 결정 단계에서는 정부와 협조하여

어느 범위까지 난민을 허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수용단계에서는 휴전선 및 해역별로 설치한 임시수용소에서 약 1주간 체류하면서 난민 분류 후 국가수용소로 호송하고, 송환단계에서는 상황이 종료 후 난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16,pp.84-85].

4.2 주변국 문제

주변국 문제는 한반도 군사통합간 주변국의 군사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군사적 개입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심이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과 반응은 남북한 통일의 외부적 틀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도록 설득해야 하며, 최소한 적극적 방해를 하지 않고 압목적 인정을 하도록 외교 노력을 해야 한다. 한반도 주변 4국은 국가이익이 상이하여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현재의 분단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G2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통일 후 강력한 통일한국군의 출현을 경계하고, 상대방 국가에 경도되어 자국의 영향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 국가별로 가져오는 편익과 장점 등 논리를 개발하여 주변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즉 주변국의 국가이익이 각각 상이하므로 국가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에 기초한 설득논리를 개발하여 공공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주변 4강이 가지는 공통적인 불안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 논리를 제시한다면 첫째,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는 완전 폐기하고 통일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향하며, 둘째, 군사력은 일본의 총 병력, 미국의 동북아 전력, 중국의 심양군구,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군관구 병력 수준 이하를 보유함으로써 주변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며, 셋째,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할 것이고, 넷째, 지역 다자안보체제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다섯째,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임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17,pp.64-74].

한반도 군사통합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특히 중국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대비가 수립되어야 한다. 중국은 북한과 조약을 맺고 있어 북한이 요구시 국제법상 개입이 가능하다[8,pp.59-64]. 최선의 방안은

통일이전에 미국의 지원을 받거나 한국의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통해 중국의 사전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우발계획을 수립하여 국경선에 배치할 부대, 임무, 작전계획 수립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이 가시화되고 여건이 조성되어 군사통합을 추진하게 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하는가를 실천적 측면에서 군사과제를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핵심과제 5개, 중요과제 5개를 분석한 후 국방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는 제언을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평화적 군사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은 요원하다고 생각하여 군사통합에 대한 구상과 준비를 하지 못해 초기에 혼란을 겪은 서독군의 사례를 교훈 삼아 남·북한 군사통합을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요구된다. 북한군은 한국군보다 약 2배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조직적인 무력 저항 없이 초기에 군사통합을 달성하여 야만 국가통합, 더 나아가 남북한 통일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간 군사통합 협상시 통일조약과는 별도로 수개의 군사통합합의서가 별도로 작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군사통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시기를 명시해야만 군사통합 과정에서 북한군에 의한 조직적 무력저항과 한국 내 진보와 보수 간의 정치적 논쟁을 차단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군사통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군사통합에 필요한 북한군의 정보가 필요하다. 우리는 작전계획 수행에 필요한 정보는 많으나 군사통합에 관한 정보는 부족하다. 북한군의 실태 파악과 현실적인 정보가 부족하면 할수록 한국군의 통제력을 벗어난 변수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정보본부, 정보사, 국정원, 통일부, 한미연합사, 연구기관이 북한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군사통합 전문가 기구 편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임진왜란 전에 이율곡이 주장한 십만 양병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군사통합 요원 천 명은 사전에 지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모

체로 통일이 가시화되면 소집 교육 후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예규(SOP)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군사통합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국내 한 연구에 의하면 2030년 기준 군사통합에 약 20조-27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를 사전에 준비해야 되며 방대한 북한군의 병력과 무기 및 장비, 시설 등을 평시 군비통제를 통해 신속한 군사통합과 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참고문헌

- [1] 구영록, 인간과 전쟁, 법문사, p. 316, 1996.
- [2] 김동명, 독일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한울, p. 316, 2010.
- [4]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의 유형과 접근전략 연구: 합의적 흡수통합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5권, 제1호, p. 70, 2009.
- [5] 권양주, 남북한 군사통합의 구상, 한국국방연구원, pp. 40-42, 2009.
- [6] 대한민국 국방부, 2014국방백서, p.296, 2014.
- [7] 박주현, “통일에 따른 국방분야의 비용 및 효과,”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3호·2014년 가을(통권 제105호), pp. 58-59, 2014.
- [8] 박휘락, “통일과 급변사태: 군사적 과제”, 2014년 국방선진화연구회 주관 세미나(2014년 6월 19일, 전쟁기념관), pp. 10-11.
- [9] 손석현, 이라크전쟁과 안정화 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 333-337, 2014.
- [10] 장흥기 외, 남북 군사통합방안 연구, 국방연구원, pp. 95-97, 1994.
- [11] 정충열, 남북한 군사통합 전략, 시간의 물레, pp. 16-20, 2014.
- [12] 조선중앙통신, 2015년 9월 3일.
- [13] 조찬래 외, 남·북한 통합론, 대영사, p. 157, 1998.
- [14] 제정관, 한반도 통일과 군사통합, 한누리미디어, pp. 107-109, 2009.
- [15] 하정열, 한반도 통일 후 군사통합방안, 팔

복원, pp. 68-70, 1996.

- [16] 한관수, “북한의 급변사태와 군사대비”, 전략연구 통권 제47호, pp. 74-88, 2009.
- [17] 한관수, “통일한국의 군사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pp. 12-13, 2007.
- [18] 한관수 외, 『통일한국의 지상군 군사력 통합에 대한 고찰』. 2015년 교육사 연구용역, 미발간.
- [19] A.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 and Forc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pp. 38-40, 1965.
- [20] S. Nye, Jr, “Cooperative Regional Integration: Concept and Measurement”, Integrational Organization 21, pp. 855-880, 1968.
- [21] K. W. Deutsch, et al.,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5, 1957.
- [22] M. Weiner, “Problems of Integration and Modernization Breakdowns”; J. N. Finkle and R. W. Gable, eds., Political Development & Social Chang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p. 551, 1966.
- [23]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view_mode\]=detail&srh\[seq\]=11924](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view_mode]=detail&srh[seq]=11924)(검색일:2015.11.23.)

[저 자 소 개]

한 관 수 (Kwan- soo Han)



1984년 2월 성균관대 경영학 학사
1997년 8월 연세대 행정학 석사
2003년 2월 단국대 정치학 박사
2014년 8월 중국 인민대 연구교수